

부산형 RISE 1차 성과공유… “교육·산업·정주 있는 구조혁신”

부산형 라이즈 동행포럼 개최

21개 대학 122개 과제 본격 추진
1341억 투입 대학·산업연계 확대
기업 수요 반영해 연 2.5만명 양성
2년차 부울경 협력으로 초광역 대응

부산시는 부산형 라이즈(RISE)의 1차년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026 부산형 라이즈(RISE) 동행포럼’을 4일부터 이틀 간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라이즈(RISE)는 대학과 지역산업 등이 긴밀히 연계된 대학 특성화 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21개 대학이 122개 과제에 1341억 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됐다.

이번 포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현영 중앙라이즈위원회 위원장, 최재원 부산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부산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대학 총장, 기업대표, 지역혁신기관장 및 대학생 서포터스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 개막행사는 성과 보고, 사례



부산시청 전경.

발표, 지·산·학 대담, 넥스트 라이즈(NEXT RISE) 비전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대학별 1차 년도 라이즈 성과 발표 ▲지역혁신기관별 연계·협력사업 설명회 ▲부산라이즈 분과위원회 회의가 이어지며, 부대·연계 행사로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부산이라는 주제로 게임·웹툰·관광·디자인 콘텐츠를 제작·발표하는 부산 콘텐츠 경진대회(동서대 주

관)도 진행된다.

시는 지·산·학 협력을 핵심 현안으로 추진해 온 만큼 라이즈 시행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단순한 사업 성과를 넘어 교육·산업·정주가 연결되는 구조혁신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현장과 강의실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 수요 기반의 라이즈 인재를 연간 2만5000여명 양성했고, 특히 가장 반도체 소부장단지 내 개소한 필드캠퍼스는 교육·산업·고용·정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된 전국 최초의 혁신모델로 선보였다. 더불어 지역대학들이 2125개 기업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공동연구 등 다방면에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특화 비자 도입(150명), 광역형 비자 시민사업 등 정주기반 강화로 외국인 유학생 2만2000명 시대를 열었고,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지역 혁신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부산형 라이즈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올해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초광역 라이즈(RISE) 정책’에 선제 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연합형 공유대학을 확대하고 대학별 역할 분담과 특성화에 집중한다. 부산형 라이즈는 ▲연구중심형 ▲교육중심형 ▲직업평생교육중심형으로 역할을 분담해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정부 공모가 예상되는 ‘초광역 라이즈과제’는 부울경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부울경 라이즈센터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 초광역 라이즈대학협의체를 발족해 본격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2년 차인 올해는 지난해 축적해 온 기반 위에서 각자의 시·도와 성과가 보다 넓게 연결되고 깊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의 대학이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되, 필요할 때는 서로의 역량을 연결·확장하는 유연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5차 지정
20여개 기업 8조6000억 투자
부산 강서 데이터센터·R&D 신설

부산과 울산에 약 8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가 추진된다. 정부가 부산·울산 지역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면서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R&D)센터 투자가 예정된 강서구 일대에 37만1000평 규모의 특구 1곳이 새로 지정됐다. 울산은 조선·자동차부품

관련 기업 투자가 계획된 동구와 북구에 총 22만4000평 규모의 특구 2곳이 신규 지정됐으며, 기존에 지정돼 있던 3개 특구는 추가 투자 유치에 따라 지정면적 24만2000평이 확대됐다.

이번 지정·변경으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개 기업이 약 8조6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가 포함될 경우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울산은 기존 특구에 외국인투자 면적이 포함되면서 이번 지정·변경을 통해 총 173만6000평으로 면적 상한을 넘어선 첫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행정통합도민의견조사브리핑.

경남 “행정통합 최종 결정 주민투표”

여론조사서 75.7% 주민투표 선호
통합시기 조기보다 단계 추진 우세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가늠할 여론 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리얼미터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만 18세 이상 12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75.7%가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결정 방식으로 꼽았다. 지방의회 의결 지지는 12.7%에 머물렀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중시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조기 통합을 선호한 비율은 30.1%였고, 2028년 또는 2030년 이후 단계적 추진을 지정한 응답이 53.1%로 집계됐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를 정비한 뒤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시·도민의 신중론이 반영된 수치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 2027 국가예산 4조 확보 목표

광역철도 등 신규사업 추진

울산시는 2027년 국가 예산 4조원 확보를 목표로 광역철도 건설 등 대형 신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3일 오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 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핵심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2027년 국가 예산 목표액은 보통교부세 1조원과 국비 3조원을 합친 4조원이다. 올해 확보액보다 2592억원(6.9%)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해 국

비 2조 7754억원과 보통교부세 9654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조 7408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지역 경제 난관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린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주요 신규 사업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기술 개발, 4극3특 과학 기술 혁신 지원 사업, 지역 성장 자금 조성, 반구천 세계유산 체험·체류형 문화경관 조성 사업 등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확대

사업 참여 홍보·프로그램 설명회

경북도는 지역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참여 홍보와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사업수행기관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울진과 영덕, 포항, 경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지역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과 참여 방법,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은 경북 지역 해양수산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 개발과 마케팅,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등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해양수산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오며 일자리 창출 3천907명, 연평균 매출 8.5퍼센트 증가, 신규 창업기업 45개사 발굴 등의 성과를 거뒀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경북교육청

영천에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경북교육청은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늘어 2020년 5128명에서 지난해에는 6560명이 됐다. 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은 기관·사업별로 분산돼 학부모와 학생이 필요 서비스를 찾아 먼 곳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교육원은 영천의 옛 청경초등학교에 조성돼 203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은 지상 4층, 총면적 4974㎡ 규모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도시공사

지역업체 공공구매 980억 배정

부산도시공사가 지역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2026년 연간 공공구매계획을 확정했다. 공사발표에 따르면 올해 총 구매 예정 규모는 약 1250억원인데, 이 가운데 77%인 약 960억원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투입한다. 법정 의무 비율 50%를 27%p 웃도는 수치다. 특히 부산에 있는 업체에는 전체 구매액의 78%에 해당하는 약 980억원을 할당했다. 지난해 지역 업체 구매액 430억원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공사는 지역 업체 구매 비중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공공구매 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상공회의소

지역 수출기업 FTA 맞춤형 지원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경북도,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2026년 불확실한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FTA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에 중점을 두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OK FTA 컨설팅과 기업별 특화 FTA 맞춤형 컨설팅, 상주 관세사의 기업별 1대1 상담,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제3자 확인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주시

설 연휴 종합안전대책 가동

경주시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설 연휴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각종 생활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경주시는 연휴 기간 행정안전국을 중심으로 12개 반, 하루 평균 37명씩 총 185명의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